

제언

2014년 산업보건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 이철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한 노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되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산업보건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업무상 질병재해자 수가 2007년도에 11,472명까지 치솟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비중으로 따져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질병재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액도 2011년도 기준으로 전체 보상액 3조 6,254억 원의 21.3%인 7,718억 원에 이른다. 질병재해자 수가 전체 재해자의 78%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강도나 경제적인 손실은 매우 크다.

국내 산업보건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먼저 고용환경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업무상 질병의 60%를 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고용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면에서는 생산 공정의 다변화와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종(多種)·다양(多樣)해지면서 새로운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과 석면 작업현장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청업체에서 하던 유해 작업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로 이전되면서 작업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측면에서는 산업보건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건강이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2년도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는 1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6.8%, 일반질병유소견자 등 2만 5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다. 특히, 흡연·음주·비만 등으로 인한 일반질병(폐·간질환·당뇨 등) 요관찰자의 만인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 폐암 발생자 및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질환,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기능위주로 개편했다. 우선, 산업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보건과를 신설했다. 이는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업종 위주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산업보건 업무 전반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산업보건 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산업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산업보건 이슈에 대해 한 발 앞서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산업보건 인프라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산업보건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산업보건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산업보건의 정책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자 수 중심의 성과관리 지표를 산업보건 분야에 적합한 지표로 바꿀 계획이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감정노동, 생식독성 및 나노물질 등 신종 직업성질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업무상 질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산업보건 연구 및 역학조사 기능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작업환경개선 및 건강보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측정 및 특검 기관에 대한 실적 및 신뢰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교육기관, 석면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석면 함유 제품 수입·유통 경로 추적관리를 통해 석면장해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를 2018년까지 5곳씩 연차적으로 늘려 건강상담, 건강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 평생건강관리 허브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산업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산업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MSDS 등을 망라한 산업보건 종합 DB를 구축, 양방향·맞춤형 정보지원으로 민·관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간기관의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기관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보건 정책 추진을 통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국내·외 산업보건 환경 및 여건 변화에도 한 발 앞서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보건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올 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